

3차시. 갈등해소를 위한 시민참여

1.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미

가.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¹⁾

이론적 의미에서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1) 최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 시민참여에 의해 공공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모든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의 방법이나 참여의 정도 등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시민참여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지칭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학습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시민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타당한 공공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최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 최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가운데 단순 정보제공 만을 위한 것과 어떤 형태이든 의견수렴(Feedback)이 이루어지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것을 광의적 참여적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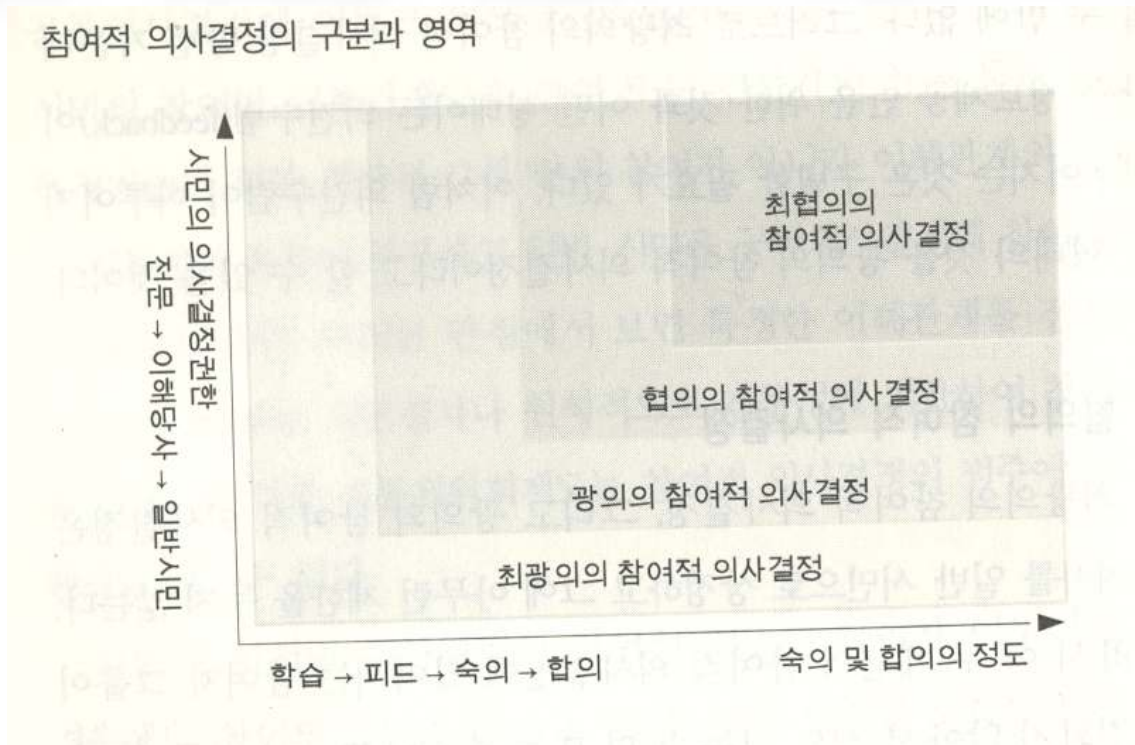
3) 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 최광의의, 그리고, 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참여자를 일반 시민으로 상정하고 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의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참여자 그룹이 특정되지 않아서 심도있는 논의 또는 숙의(deliberation)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시민과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특정하여 제한된 사람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보다 집중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공공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최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

- 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에는 선발된 사람들이 단순히 논의나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와 선발된 사람들이 정기적이고 보장된 참여에 의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는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 이를 최협의의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200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림1] 참여적 의사결정의 구분과 영역

나. 참여민주주의 및 숙의민주주의와 참여적 의사결정

참여적 의사결정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여적 의사결정은 다른 참여민주주의의 구현방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적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보다 자기 주장과 이해를 다른 주체의 주장과 이해에 비추어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2) 참여적 의사결정은 참여만이 아니라 숙의를 중요시하는 시민참여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여적 의사결정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컨대 참여적 의사결정은 피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 토론을 거쳐 참여자들의 민주적 선택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공공정책과 참여적 의사결정²⁾

2)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200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 공공정책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왜 필요한가?

- 최근 정부에 의해 마련된 여러 공공정책들의 집행과정을 보면, 이들 정책들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추구가치, 또는 정부정책들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시행주체, 해당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이러한 공공정책 표류현상은 공공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원으로서는 다양한 가치, 이해,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해석들이 사회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실제 공공정책의 형성이나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공공정책과정에서의 혼란의 원인의 하나는 기존의 정책형성과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정책분석방법이 해당정책과 관련된 가치나 정보 등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감소시킬 방법론적 도구로서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배경

- 대형국책사업(예.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전철사업 등)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 배제되었던 해당사업의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등의 사회단체들이 정책집행을 필요로 하는 문제상황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상이한 해석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 관여하여 무엇이 문제상황인가에 대한 '사고적(ideational)' 또는 '정의적(definitional)'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함

- 세계화의 진전 또는 급진적 개인주의의 성장으로 인한 시각의 변화
- 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보다 기본적인 이유는 참여자들이 갖는 인식론적 근거 (epistemic 또는 frame of reference: 가치, 이념, 규범 등)가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상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임

-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상이한 해석(담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표1] 동강댐건설관련 갈등 당사자들의 담론들

[표 2-1] 동강댐건설관련 갈등 당사자들의 담론들

구분	건교부	지역주민	환경단체
인식론적 근거	현대산업/실용주의 (수자원)	경험적/지방적 지식 (지형적, 지질적 조 건과 지역별 차별)	지속가능발전
문제상황 정의	물부족과 홍수	역류, 안정성, 부채	내재적, 심미적, 문화 적 환경가치의 파괴
목적	수자원공급과 홍수방지	생존권보호	환경보전
수단	댐건설	댐건설에 찬성/반대	댐건설 저지
정체성(Identity)	공익제공자	희생자	가치관적 압력단체
전략적 규범	홍수안정 vs 불안정	삶의 안정 vs 불안정	파괴 vs 보전
수자원관리 형태	공급위주		수요관리

※ 자료 : 강상규(2005), Reflexive Idea, Argumentative Struggle, and Institutional Change, p.189.

* 자료: 강상규 (2005), reflexive idea, argumentative struggle, and institutional change, p. 189

- 동강댐 예시에서처럼 공공정책과정에서 해당정책에 영향을 받는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해석의 출현과 이에 비롯한 정의적 갈등은 정책결정활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 기존의 공공정책과정에서는 무엇이 문제상황인가가 정부에 의해 이미 정의되었기에 정책결정의 성격은 주로 이의 해결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 문제였다
- 새로운 정책환경에서는 성격이 다른 상이한 해석들을 어떻게 조율하여 문제상황에 대한 합의된 해석과 이의 해결방법을 도출하는가 하는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 그러나 그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가 결여되어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로인해, 상이한 문제상황의 해석들이 충돌하는 공공정책과정에서 참가자들의 논쟁과정은, 자신들만의 해석을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의 해석을 부정하려는 해석들 간의 '경쟁과정' 또는 헤게모니 쟁탈전이 되고 있다.
- 이러한 경쟁은 정책의 표류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파괴, 정부간 갈등의 심화,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불신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다. 공공정책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

1) 공공정책과정에서 정책 분석이란?

-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지식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활동
(예.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2) 기존 정책분석의 문제점

-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들의 연구의 핵심은 경험적 연구방법 (예. 비용/편익분석, 수학적 시뮬레이션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활동들은 전문가들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에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책분석을 하는 전문가와 사회상황과의 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전문가들의 정책분석활동이 '가치-사실 분리' 원칙에 바탕을 둬서 특정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가치, 선호, 요구, 필요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상태로 제한된 사실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되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기술적 형태의 지식을 강구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과정을 통해 생산된 지식은 실제 정책결정은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이런 판단에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3) 새로운 정책분석 전문가의 역할

- 정책수립을 위한 지식은 논리적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참가자들간의 대화적 상호작용에 의해 얻어지고, 정책결정이란 이런 논쟁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된 의미를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에 부여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이해는 정책분석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 요컨대, 문제상황에 대한 관련주체들의 상이한 해석들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관련주체간 상호조사와 학습이 이루어져, 문제상황에 대한 정의와 그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된(informed) 선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규칙과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정책분석의 주요임무라 할 수 있다.
- 이런 이유에서 정책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필요하며, 이 참여적 의사결정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전문가의 지위는 이제 정책과정에서 관련주체간의 '대화의 촉진자'이며 동시에 '사회학습의 촉진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4) 참여적 의사결정의 효과

- 다양한 가치와 견해를 정책형성과정에 포함시킴으로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
- 참가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관적 견해와 상이한 견해가 있음을 인지하여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됨
-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고, 또한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의 증가는 서로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사회학습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의 대상이 되는 문제상황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된 선택을 할 수 있음
-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

-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대
- 궁극적으로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화에 기여함

3. 적극적 시민참여의 개념 및 유형

가. 적극적 시민참여의 필요성³⁾

1) 정책환경의 변화

-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정책이 결정되어 왔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은 민주화시대에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 공공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조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사회입장에서도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 공공정책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

2) 공공정책이슈 성격의 다양화

- 공공정책 이슈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 등의 증가에 따른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당성 추구

3) 갈등상황의 존재

- 공공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부족, 정보처리능력의 부족, 편향적 인자, 단편적이거나 왜곡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정책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견해를 달리하며 갈등상황에 빠져들기도 한다
-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덜 조직화되고 사회체제에 명확한 권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운, 다루기 힘든 갈등문제를 발생시킨다

4)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추구

- 다루기 힘든 갈등의 경우 합의형성을 위한 대안선택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합리적 학습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은 절차적 합리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절차적 합리성은 그것이 하나의 적절한 숙고과정에 기초한 결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 대안선택을 둘러싼 갈등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는 숙고과정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의존한다.

나. 시민참여(public involvement)의 유형⁴⁾

1) 시민 배심원제(Citizens Juris)

3) 김태홍 외, 2005,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4) 신경희 외 2009,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임의로 선택된 12~20명 정도의 시민그룹이 미리 정해진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교환 하여 공동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법
- 배심원단을 선출할 때에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배심원단에게 제시하는 질문은 가치성향의 질문이어야 함. 기술적인 질문은 피할 것

2) 시민패널(Citizens Panels)

- 시민그룹(약 12명 정도)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
- 시민배심원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숙의를 거친 공동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에 비해, 시민패널은 때로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공동의 결론 도출보다는 각각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플래닝 셀(Planning Cell)

- 시민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집·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약 25명 정도의 시민 그룹을 구성하여 토론을 하게 됨
-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대안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 쟁점에 대해 ‘동의’ 혹은 ‘부동의’라는 명확한 결론이 필요한 이슈에는 적합하지 않음.

4)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 임의로 선정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10~30명의 일반시민 그룹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과학적·기술적 주제에 대하여 평가하는 일종의 시민청문회
-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한 일반인의 합리적 의견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지원자 중심으로 시민 그룹을 구성하게 되어 대표성이 약함
- 1단계) 소수의 사람들, 특히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합의를 위한 토의과정을 수행함 / 2단계) 주요하게 도출된 결론들 및 분석내용들을 대중매체와 일반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회의를 함

5)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시민들을 선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한 후 참여자들의 숙의를 거친 여론 즉 '공론(public judgement)'을 확인하는 방법
- 통상적 여론조사 방법이 시민들의 피상적인 태도조사에 그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
- 단순하게 찬반의견만 확인하는 일반 설문조사와 달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시민 배심원제와 비교하면 공론조사 역시 시민그룹의 숙의를 거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공론조사는 시민 배심원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조사하게 됨

6)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 특정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논하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 됨
-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면접촉 워크숍을 통해 한 번의 토의를 하는 방법(one-time, face-to-face)
- 토의 시작 시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될 있음

7)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exercises)

- 특정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스스로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찬반이 갈리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비적대관계로 접근함(non-adversarial approach)

8) 여론조사(Surveys)

- 표본 집단에게 인터뷰, 전화, 질문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묻는 방법
- 표본 집단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위집단인 모집단(population)에 적용하여 모집단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파악하려는 작업
- 결과 도출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도출하고자 할 때는 적합하지 않

은 방법일 수 있음

9) 공청회(Public Hearing)

-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집회로서 주최측에서 주제에 대한 발표 (prestatement)를 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주최 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짐
- 관심 있는 특정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정보제공의 기회, 잠재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10) 대중모임(public meeting)

- 시민과 계획안 작성자의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의 의견도 청취하는 모임
- 공청회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그 규모가 작음

11) 오픈 하우스(Open Houses)

- 시민들을 특정한 날(하루 혹은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 장소에 편한 시간에 들릴 수 있도록 초대함
- 시민들은 스탭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음. 자유롭게 소그룹 토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응답하여 대립되는 이슈들에 대해 동의를 유도할 수 있게 함

12) 시민자문위원회(Citizen Advisory Committee)

- 대표자 그룹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이슈에 대해 의논하는 방법
- 위원회는 다양한 기관들(정부조직에서 일반시민들까지)에 의해 구성할 수 있음. 다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함

13) 커뮤니티 계획(Community Planning)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 계획의 내용은 목표설정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욕구의 파악, 목표의 설정, 그것이 요하는 기간, 각종 사회자원의 활용방법,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입안 등을 포함함
- 계획단계에 서는 각종 관계기관 대표자, 주민 대표자가 참가하여 합동계획방식에 의한 종합계획의 책정이 바람직함
- 계획의 효과적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체계로서 심의회, 의회 등이 필요하며, 계획 작성으로부터 실시,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14) 공고 및 배포 후 의견 청취(Notification, Distribution & Solicitation of Comments)

- 보고서를 배포한 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
- 가장 간단한 방식

15) 국민투표 (Referenda)

-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는 방법
- 질문은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 가능한 것이어야 함
- 투표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

16) 구조화된 가치에 대한 국민투표(Structured Value Referenda)

- 일반 대중들의 선호(preference)가 무엇인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 핵심 요소 : 1)결정해야 할 정책 선택, 2)목적들을 구조화함, 3)대안을 개발함(기술적인 과정), 4)대안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결정함, 5)질문을 구조화함, 6)투표 방법을 선택함, 7)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함

[표 2-18]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특징 개관

참여 모델	절차 개요	특징	참여자 성격	장점	단점	적용
포커스 그룹	토론 → 의견확인 →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로운 형식의 소규모 토론 모임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 확인 	공공기관에 의한 의도적 선발(다양성, 균형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통시민의 견해 확인 특정 문제에 대한 질적 의견 수집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의 참여자로 인한 낮은 대표성 일반시민의 결과 수용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유형의 갈등에 폭넓은 적용 보통시민의 심층적 의견 확인
공론조사	기준조사 → 토론회 → 의견조사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론조사와 속의과의 결합 	대표성 있는 일반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지식과 정보가 제공된 시민에 의한 질적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참여자로 인한 낮은 심사속고성 낮은 비용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지역적 범위 모두 적용 가능 가치갈등, 이익갈등 모두 적용 가능 대안 선택 가능한 복잡한 문제
시나리오 워크숍	시나리오작성 → 공동의 전망 수립 → 공동의 실행계획 수립 → 공공기관에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이 지역 전문가로 참여 	이해관계자 대표 (공공기관, 기술전문가, 업계, 일반 시민의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민의 역할 증대 다다른 이해관계자 대표와 대등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의 어려움 비용효율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갈등 가치갈등, 이익갈등 모두 적용 가능 미래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서 다양한 유형의 선택 가능한 대안이 존재

규제협상	협상 →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대표와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으로 규칙 제정 	이해관계자 대표 (환경단체 등 공익단체, 일반시민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이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참여의 효과 큼) 갈등예방 우호적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 어려움 타협으로 문제해결(가치갈등에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지역적 범위 모두 적용 가능 이익갈등 이해관계인이 뚜렷이 확인 가능하고 수가 제한적인 경우 적용 가능
CPS	문제의 정의 및 분석 → 해결방안의 제안 및 평가 → 해결방안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이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이해관계자 대표 (환경단체 등 공익단체, 일반시민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이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참여의 효과 큼) 갈등예방 우호적 관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 어려움 타협으로 문제해결(가치갈등에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지역적 범위 모두 적용 가능 이익갈등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할 경우
라운드 테이블	준비절차 →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 원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문제에 관해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이해관계자 대표 (공공기관, 일반시민, 환경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이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참여의 효과 큼) 갈등예방 우호적 관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 어려움 타협으로 문제해결(가치갈등에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지역적 범위 모두 적용 가능 이익갈등 창의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시민자문 위원회	정보제공 → 토론 → 결론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출된 시민의 견해를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 대표(상반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반영 가능성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적 갈등 이익갈등, 가치갈등 모두

참여형태	과정	장점	단점	적용분야		
시민 배심제	정보제공 → 숙의(질의, 답변) → 결론도출 → 정책권고안발표	• 충분한 정보를 학습한 일반시민의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	일반시민(대표성 확보한 시민대표)	• 일반시민에 의한 정책결정 •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사회적 목표로서의 공공선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수용성 확보 어려움 소수참여로 인한 낮은 대표성 결과에 대한 시민 전체의 수용성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적용 가능 견해가 다른 개인이나 그룹 간의 합의도출 전국적, 지역적 갈등 모두 적용 가능 가치갈등 복잡하고 논쟁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선택 필요시
플래닝 셀	준비단계 → 정보학습 → 권고안 초안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공공기관에 전달 및 배포	• 충분한 정보를 학습한 일반시민의 대표자가 정책을 결정	일반시민(무작위 선발된 대표)	• 일반시민에 의한 정책결정 •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사회적 목표로서의 공공선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참여로 인한 낮은 대표성 결과에 대한 시민 전체의 수용성 확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 지역적 갈등 모두 적용 가능 가치갈등 복잡하고 논쟁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선택 필요시
합의회의	전문가패널의 정보제공 → 숙의(질의, 답변) → 결론도출 → 기자회견으로 정책권고안발표	• 과학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이 학습 후 결론 도출	일반시민(자원 후 선발된 시민)	• 과학기술적 정보제공 • 공공선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자 참여로 대표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 지역적 갈등 모두 적용 가능 가치갈등 일반시민의 과학기술적 인식, 공론화 필요시 복잡, 기술적인 논쟁적 사안

[참고문헌]

1.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